

시일야 방성통곡 신행정수도

한 종 동
(공주시 중동 228)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도 나눌 줄 모르는 수도권의 기득보수세력과 이에 맞장구 치는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 신행정수도의 특별법이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고 허탈해서 할 말이 안나온다. 서울에서 평평거리고 사는 사람만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600년 도읍지가 서울이므로 행정 수도이전은 안된다는 것은 새로운 조선시대 신분 차별의 노비문서가 생겨남을 이야기함이 아닌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생 양반으로 대접받아야 마땅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놈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과 무엇이 틀리단 말인가. 조선시대에도 서울이 서울이었던가! 그당시엔 조선의 서울은 엄연히 한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지금의 수도 서울 강북의 한 귀퉁이에 불과했다.

현재의 위헌 결정은 마치 행정수도이전은 안된다는 결론부터 내린 다음 그 결론을 합리화·명분화·합당화시키기 위해 헌법학책에도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의 재판관들은 헌법학의 현자도 공부하지 않은 판사와 검사들 아니던가!

위헌결정 이후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와 당직자들이 TV에서 현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참을 수 없다. 그들이 작년 다수당일 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그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키고 나서 웃고 있는 모습은 웬지 '한나라당이란 애들 소꿉놀이 하는 당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인가!

행정수도 이전이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차근차근 준비해온 국가적 흥망이 걸린 대사업이 자명하고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공약으로 내걸어 당선 되었고 그 후 수많은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2년여간 연구개발하였고 또한 수많은 전국순회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주, 연기지구 입지 최종 확정 발표 등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앞으로 나아간 국가적 사업임에 틀림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

현결정판결이 난 것도 사실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이대로 불난집 불구경하듯 가만이 있으면 흐지부지 되어 없었던 일이 되고 만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준비된 항의 표시와 투쟁만이 우리가 얻으려 했던 몫을 찾을 수 있다.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상경투쟁을 독려하여 우리 충청도가 핫바지가 아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도에서는 공주시, 연기군 등 기타 충남내의 시군과 협의하고 대전,충북등 이해가 걸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 우리 충남도민들도 항의의 표시로 근조기를 내걸고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개최하고 서울 헌법재판소와 한나라당 당사로 올라가 우리의 지역민들의 성난 분노의 마음을 표시하는 등 물리적 행사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일어서야 한다.

우리에게 명분이 확실하다.

국가의 균형발전이 그것이다.

역사와 후손들앞에 부끄러운 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가 물건너 가면 더 이상의 호기는 오지않는다.

충남지사와 지역국회의원은 즉각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신행정수도가 경상도나 전라도에 건설하려 했다가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다면 아마 난리가 나고 제 2의 부안사태같은 대규모 민란이 발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